

중국의 일본에 대한 적대적 역사 활용추이와 강화요인: 청일·중일전쟁을 중심으로*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이 글은 중국 당국에 의한 일본에 대한 적대적 역사의 활용 동학을 검토하였다. 중국 공식매체를 통해 청일전쟁과 중일전쟁의 기억이 강화되는 현상은 영유권, 역사 문제상의 갈등으로 인한 국내 민족주의 감정의 발로로 이해되기도 하고, 국내 정치과정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도 상정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인민일보』에서 청일, 중일전쟁을 다루는 기사들의 추이를 기초로 중국 당국의 역사적 활용추세를 구하고, 그 확대 추이가 일본발 외부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지, 중국 정치의 권력 강화 국면으로 설명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두 요인이 결합되었을 때에 적대적 대일 기억의 전략적 활용이 현저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주며, 내부적 국내 정치 요인은 적대적 대일 기억의 활용이 줄어들기 어렵게 한다는 점과 외부적 일본 요인은 적대적 대일 기억의 강화와 직접적 관련성이 작다는 점을 제시한다. 여론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과 민족주의 여론 모두가 확대되었을 때, 일본에 대한 적대적 역사 문제가 중국 당국에 의해 적극적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주제어 중일전쟁, 청일전쟁, 중일관계, 중국 정치, 중국 민족주의

I. 서론

이 글에서는 “중국 정부는 어떠한 조건에서 일본과의 적대적인 역사를 보다 강하게 활용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질문의 중요성은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정치 문화 전개방향과 관련된다. 특정 국가 내 역사에 대한 지배적인 이해가 국제정치 문화의 전개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수천 년에 이르는 상호교류의 역사를 갖는 동아시아의 각국은 적대적 질서, 경쟁자적 질서, 공동체적 질서를 모두 경험했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적대적 질서에 대한

* 본고의 발전을 위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여러 심사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2016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기초연구사업의 지원과 2015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NRF-2015S1A3A2046903)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기억에 초점을 맞출 때, 그와 관련된 적대적 정체성을 국가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정체성은 국가가 자신이 가진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이미지에 따라 행동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실제 적대자가 되도록 이끌며 흡수적인 국제정치 문화의 등장을 추동한다(Wendt, 1999: 263). 또한, 특정 시점에 강조되는 역사는 정책결정자의 선호라는 중요한 정책결정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적으로 전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역사와 문화는 다수의 국민과 미래의 정책결정자들에게 내면화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Nogee et al., 1995: 55; Callaghan, 2010: 31-60).¹ 이러한 점을 전제한다면, 일본에 대한 적대적 기억이 중국에 의해 어떻게 재생산, 확대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대처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다.

중국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적대적 대일(對日) 기억은 19세기~20세기의 두 개 전쟁에 대한 것일 수 있다. 청일전쟁(1894~1895)과 중일전쟁(1937~1945)이 모두 중국으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양보의 손실과 정치적 단결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청일전쟁(혹은 갑오전쟁(甲午戰爭))은 1895년 7월 25일 중일 양국의 한반도에 대한 병력증강 과정에서 일본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었으며,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통적 영향력 포기, 요동반도 등의 할양, 배상금 2억 냥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한 시모노세키 조약(또는 마관조약(馬關條約), 1895. 4. 17)에 의해 종결되었다(김용구, 2012). 대만과 센카쿠/다오위다오에 대한 관할권도 이때 일본에게 넘어갔다. 중일전쟁은 북경 서남부에서 훈련 중이던 일본군이 중국군과 충돌한 사건인 1937년 7월 7일의 노구교사건으로 시작되어, 1945년에 태평양전쟁의 종결과 함께 끝났다. 전쟁 초기 일본군의 남경점령 시 보급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군기위반이 방치된 일본군에 의해서 중국 민간인들이 처참한 상황에 처한 남경학살이 발생했다. 그에 따라 고양된 항일민족주의는 중국공산당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 두 가지 전쟁은 모두 중국 정부가 자신의 정책적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일본에 대한 적대적 기억이 될 수 있다.

¹ 한편, 선호형성(preference formation)에 대한 접근성 모델(accessibility Model)에 따르면 일본과의 적대적 기억의 답론은 시기적으로 강화된 것 자체만으로도 대중의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Druckman and Lupia, 2000: 8-9).

II. 접근방식과 연구방법

1. 접근방식

중국이 청일전쟁과 중일전쟁 등 일본에 대한 적대적 역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중국 국내의 민족주의 여론을 확대시키는 일본의 대중(對中), 역사정책 등을 중국의 일본에 대한 적대적 입장 강화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 국내의 정치 과정을 청일·중일전쟁의 기억을 소환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주목하는 시각이다.

첫 번째로, 청일전쟁과 중일전쟁의 역사가 확대 재생산되는 현상은 일본의 보통국가화나 영토/역사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 등 외부요인에 의해 촉발되는 현상일 수 있다. 우선, 이들 외부적 요인은 중국 국내의 민족주의 여론을 급격히 고조시킨 결과, 중국 당국으로 하여금 그러한 여론을 수용, 무마하기 위한 필요에서 청일전쟁과 중일전쟁 등 일본에 대한 적대적 기억을 강조하게 할 수 있다.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당국은 사회주의 이념의 약화로 인한 통치정당성의 침식을 극복하기 위해 집중적인 애국심 교육 프로그램을 개시했(Zhao, 1998: 288-291), 그 결과 중국 국내 대중들의 민족주의적 입장은 중국 당국이 통제하기 버거울 만큼 성장한 측면이 있다(Reily, 2011: 37-39). 2000년대에 들어서는 중국 국내 여론은 외교정책의 변수 중 하나로 상정되고 있으며, 2000년대 후반 들어 중국의 국가적 성취에 따른 자긍심의 고취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논의되는 것이다(Lampton, 2013: 73). 일본과의 이해관계 충돌로 국내 민족주의가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대중적 수준의 광범위한 민족주의와 그에 입각한 비판에 의해 잠재적으로 정치적 정당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Yu, 2012: 201). 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이 과거 역사를 통해 국내적으로 일본이 꺾끄러워할 중국 내의 반일민족주의를 부추기는 조치를 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일 수도 있다. 양면게임(two-level game)의 분석틀을 통해 본다면, 국내 행위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의 경우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방안(win-set)이 넓으며, 그 결과 대외협상에서 협상력을 국내적 이유를 들어 제고하기 어렵다(Putnam, 1988). 이러한 조건에서 센카쿠/다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여러 차례의 중일협상을 치러본 중국은 2005년 들어 협상력 제고를 위해 민족주의 단체의 반일활동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평가된다(Chung, 2007: 62).

이러한 외부적 접근방식에서 중국의 청일·중일전쟁 역사의 선전 확대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 본격화 동향에 맞춰 표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이후 보여지는 중국의 센카쿠/다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한결 강경한 태도 역시 주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반응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의 국력증대를 배경으로 “핵심이익” 개념의 적용범위가 대만에서 신장, 티베트, 그리고 센카쿠/다오위다오 등으로 넓어지고 있지만,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공세적 입장은 미국, 일본 등 다른 강대국들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세적 입장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의해 도출되었다(Swaine, 2011: 11).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와 같이 해양 영유권 문제에 대한 공세적 대응이 등장한 2010년 초까지도 중국이 생각하는 분쟁지역에 대한 기본전략(협상과 상황관리 선호, 방위유지)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Swaine and Fravel, 2011: 14). 2010년대 들어와 더욱 강경해진 센카쿠/다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선제적이기보다는 반응적 성격이 강했다(이동률, 2015: 66).

두 번째로, 중국 지도부가 청일·중일전쟁의 역사적 기억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 국내적 요인의 결과일 수도 있다. 중국의 권위주의체제에서는 당국이 국내 여론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중국 당국의 일본에 대한 과거사 제기는 국민의 민족주의 감정에 의해 이끌려간 결과이기 어렵다. 그렇다고 중국 당국이 국면전환 등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세적으로 조장한 것이 되기도 어렵다. 국면전환이론에서는 국내 정치적 위기에 처한 국가 지도자가 국제무력분쟁에 개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외적 위협을 이용해 지지도의 제고를 도모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Brody, 1984: 45-46). 이러한 논리의 연장 선상에서는 외부위협으로서 일본의 이미지는 중국의 정치안정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1937년에 시작된 중일전쟁은 중국인들이 민족공동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대중적 민족주의는 그에 부응한 중국공산당의 전국적 정당성의 기초였던 것이다(Johnson, 1962; 서진영, 1992: 334-335). 그러나 선거제도 하의 국가지도자를 전제한

이러한 국면전환 이론을 중국에 적용하기란 곤란하다.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여론의 관심을 민족주의적 갈등이나 역사문제로 돌려 얻는 이득이 불확실하다. 비록 일본에 대한 적대심이 공산당의 역사적 정당성이나 군사력 건설 정책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효과는 있지만 오히려 중국인들의 피해의식을 자극해 더 큰 소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적대적인 역사를 중국 당국이 활용하게 하는 국내적 요인은 중국 정치 특유의 과정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중국 당국은 국민들의 민족주의 감정에 끌려가지 않지만, 특정한 국면에서는 국민들이 제기하는 역사문제를 취급할 방어적 필요를 갖는다. 이러한 필요성은 신지도부의 권력 강화 혹은 권력공고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의 집단지도체제에서는 집단지도체제 하에서도 지도자의 영도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구심점인 핵심이 존재한다.² 이 때문에 총서기 지위가 후임자에게 이양되어 새 지도부가 출범된 이후에는 새 지도부가 핵심에 걸맞은 권위와 세력을 구축하는 권력 강화 과정이 적극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공봉진, 2017; 안치영, 2016; 조영남, 2017a; 조영남, 2017b; 최지영, 2016; 한강우, 2016).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시진핑(習近平) 시기에 모두 이러한 과정이 보여져왔으며(공봉진, 2017: 396), 새로운 지도자의 권력 강화 과정은 막 확보한 제도적 권력만이 아니라 군권, 자파세력, 권위 등의 실질적인 권원(權原)을 확보하는 양상으로 이해되었다(공봉진, 2017: 418; 조영남, 2017a: 11-19; 조영남, 2017b: 4-7).³ 그리고 이 권력 강화 국면에서 중국의 지도자는 국민의 비판에 보다 민감해질 수 있다. 비록 국민적 지지가 높다고 해서 당권을 장악할 수는 없는 중국 정치에서, 국민의 지지는 군권, 이념, 파벌에 비해 덜 중요한 권력원이라고 논의되어 왔으나(조영남, 2017a: 12), 당권을 확보한 최고 지도자의 추가적인 권력 강화를 위한 전략상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 장쩌민

² 덩샤오핑(鄧小平)은 문화대혁명과 같은 비극을 낳은 독재정치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를 설계했으나, 그것이 파생시킬 수 있는 정책결정의 지연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구심점, 즉 “핵심” 지도자가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다.

³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었을 때에는 신지도부는 앞서 당, 정, 군에 자기세력을 포진시켜놓은 전임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극복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자기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에 계속 놓여 있게 될 것이다.

등이 성공적으로 권위를 제고하고 정적을 제거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가장 유효한 권력 강화 전략이 반부패운동 등의 정풍운동이었고(공봉진, 2017: 416; 조영남, 2017a: 30), 이는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최지영, 2016: 127).⁴ 정풍운동을 위해 국민의 지지를 조성해야 하는 지도자는 역사, 영토문제에 유약하다는 사회적 비판에 민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권력 강화 국면의 지도자는 청일전쟁, 중일전쟁의 기억을 활용하여 자신이 역사 문제를 망각하지 않는 지도자임을 강조해야 할 필요를 지닌다.⁵ 아울러, 중국의 정치과정이 대일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여러 각도에서 지적되어 왔는데, 권력교체기에 정치적 장악력과 융통성이 부족한 신지도부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타협이나 온건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동률, 2015: 79-81).

다만, 외부적 요인을 적대적 중일관계사 활용의 강화요인으로 상정하는 접근 방식과 내부적 요인을 강조하는 접근방식 중에서 무엇이 옳은지는 실증적으로 검토될 문제이다. 각각의 접근방식에 의한 예측이 실제 정치현상과 배치될 때에는 각각은 설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즉, 내부적 요인은 뚜렷하지 않고 외부적 요인만 명확하게 존재할 때에 일본에 대한 적대적 역사가 확대 재생산된다면, 이 결과는 “중국 정부는 일본의 센카쿠/다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국내적 반발 무마 혹은 협상력 제고를 위해 청일·중일전쟁의 역사를 활용한다.”는 외부적 접근 방식이 설명력을 지닌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반면, 외부적 요인의 존재감은 약하나 내부적 요인은 뚜렷하게 존재할 때에 청일전쟁과 중일전쟁 등 과거사를 소재로 한 선전의 강도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중국 정부는 지도부의 권력 강화 과정에서 권위에 대한 비판을 예방할 필요성으로 청일·중일전쟁의 역사적 기억을 다룬다.”는 내부적 접근방식이 타당하다는 바를 알려주게 된다.

나아가, 중국의 역사 활용에 대한 실증적 검토 결과가 외부적 요인 혹은 내부

⁴ 이희옥은 반부패운동이 권력투쟁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나, 반부패운동은 전면적인 개혁 심화의 목적도 띠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반부패운동의 권력기반은 국민의 지지로부터 나온다고도 언급했다(이희옥, 2015: 20, 27).

⁵ 이 때문에, 중국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지도자는 1930~40년대의 역사와 함께, 그 시대의 주역이었던 마오쩌둥을 전면 부정할 수 없다.

적 요인 중 어느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 복합적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 즉, 중국의 적대적 대일기억 활용이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중 하나만으로는 강화되지 않지만 두 요인이 동시에 존재할 때에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제시한 외부적 접근방식이나 내부적 접근방식의 논리 중 하나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두 가지 요인을 통합하여 적대적 역사활용의 동학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 요인으로 중국 국내의 민족주의 정서가 팽창된 현상과 국내정치 요인으로 중국 지도부의 사회여론에 대한 민감성이 확대된 현상이 결합된 결과가 적대적 역사 취급의 확대일 수 있다. 이는 중국 국내의 민족주의 여론이 당국의 입장을 변화시킬 만큼 충분히 강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비판에 대한 중국 정부의 민감성이 강화된 권력 강화 시기에 한해서는 역사문제 논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연구방법

이 글에서는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분석의 방식을 통해 중국 당국이 과거의 중일전쟁에 대한 역사적 소재를 활용하는 추세를 확인한다. 특정 연도에 청일전쟁과 중일전쟁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기사의 빈도가 증가한다면, 그해 중국 당국의 일본에 대한 적대적 기억을 확대 재생산하려는 필요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본과의 적대적인 기억을 소재로 하더라도 미래지향적 견지에서 일본에 대한 포용적·긍정적 태도를 주문하는 기사가 있을 것이나, 이때에도 과거 적대관계와 충돌에 관한 기억은 재생산된다. 청일전쟁과 중일전쟁을 테마로 하면서도 일본과의 우호나 교류의 과거 경험을 다루는 기사는 매우 보기 드물다.

내용분석의 분석대상은 『인민일보』에 게재된 청일전쟁과 중일전쟁 관련 기사이다. 『인민일보』 역시 사회주의 언론관에 입각하여 공산당의 정책을 지지하도록 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선전수단으로서 중국공산당의 입장과 의지를 제시하는 공식 창구이다(최윤규·최용준, 2013: 133). 비록 최근 중국 관영언론의 방점이 당성(黨性)에서 인민성(人民性)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선전 부문은 공산당의 입장을 지배적인 담론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공

산당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텍스트를 전략적으로 생산해내고, 그것을 『인민일보』, 신화통신, CCTV를 통해 전달한다(Cao et al., 2014: 10-11). 나아가 그 기사들은 중국 전역의 신문과 방송에 전재(轉載)된다(강현두 외, 1998). 물론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민족주의를 고무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일관계의 역사적 소재를 보다 풍부히 다루고 있으나, 보다 정책성이 있는 논의는 인민일보를 통해서야 제시된다. 『인민일보』는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는 신문이기에 청일·중일 전쟁에 대한 기사가 소수에 불과하더라도, 그 주제의 정책적 중요성의 부침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보다 적합하다.

분석단위는 청일전쟁과 중일전쟁에 관련된 역사적 주제이다. 일본에 대한 적대적 기억을 다루는 기사의 주제는 청일전쟁과 관련된 것으로는 ‘청일전쟁(갑오전쟁)(일반)’, 센카쿠/다오위다오가 일본에 넘어가게 된 계기인 ‘마관조약’이 있을 수 있다. 중일전쟁과 관련된 주제는 ‘중일전쟁(항일전쟁)(일반)’, ‘7·7 사변’, ‘남경대학살’⁶이다. 덧붙여, 덩샤오핑 등 원로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라지고 국내 민

⁶ 남경학살은 1937년 12월부터 1938년 2월까지 남경으로 진격한 일본 중지나방면군에 의해 자행된 사건으로, 중국 민간인, 투항군인에 대한 학살사건이다. 당시 일본군 내의 확전론자들은 장개석 정부가 수도 천도를 발표한 이후에도 국민당의 수도인 남경을 점령하면 장개석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어 상해를 점령한 중지나방면군이 남경을 점령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사작전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작전은 병참선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일본군의 식량조달 등의 과정에서 남경근교의 무수한 민간인이 살해, 강간 등 폭력에 일방적으로 노출되었다. 남경근교의 민간인들은 일본군의 진군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지 못했기에, 최악의 경우에는 혼란 전부가 몰살당하는 참극도 빚어졌다.

남경학살의 가장 비참한 장면은 일본군의 남경점령 이후에 벌어졌다. 남경방어군 사령관 탕성지(唐生知)의 철수계획이 일본군이 남경으로 진입한 당일(1937년 12월 13일)에야 하달되었으며, 심지어 피난의 관문인 남경북문(읍강문) 담당인 36사단에는 사령관 이외의 부대 통과를 실력으로 저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십여만의 남경방위군이 철수하지 못한 채 남경 시내에 남겨졌던 것이다. 퇴로가 아군에 의해 차단된 다수의 중국군은 전의를 상실한 채 남경 시내에 남겨졌다. 남경점령 후 일본군은 상당한 수에 이르는 이들 중국군을 색출하여 처형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인도 재판 없이 대거 처형했다.

무엇보다 남경학살 당시 일본군은 남경철수 중 사로잡힌 수만명의 중국군 병사들 역시 처형했다. 또한 남경을 점령한 일본군은 여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어 매일 수천명의 여성이 강간되고 심지어 살해되었다. 일본군의 입성식 이후 일주일 동안만 최소 8천여 건의 강간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다. 남경학살 시 발생한 인명피해 규모는 사건 이후 적절한 조사가 행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집계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동경재판에서도 남경학살의 규모가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도쿠시, 2017 참조).

족주의 여론의 정책결정과정 에 대한 영향이 상정될 수 있는 시기를 다루기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 시기는 후진타오 지도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3년부터 최근까지인 2017년 말까지로 상정했다.

중국 당국이 청일·중일전쟁의 역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현상이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의 상호작용일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은 내부적 접근방식과 외부적 접근방식의 통합을 모색하게 한다. 어떠한 정책행위를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로 상정하는 접근방식은 브레처(Michael Brecher) 등의 통합작업에서 보여져 왔다(Brecher, 1972). 여러 변수를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성을 강조한 브레처는 외교정책 투입을 조작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폭넓게 구분하고, 조작적 환경은 외부적 요인(세계적, 지역적, 양자적 수준의 상호작용)과 내부적 요인(정치군사력, 경제력, 정치체제, 엘리트 경쟁 등)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 글에서 주요 변수로 주목하는 일본의 대중 정책은 브레처의 조작적 환경 중 외부적 요인으로, 중국의 권력 강화 과정은 조작적 환경의 내부적 요인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방식은 새로운 개념 및 일반화될 가설의 도출, 외교정책 설명의 정교화, 외교정책 예측 등에 기여한다(허드슨, 2009: 277-279).

III. 중국의 적대적 역사 활용 강화요인

1. 일본 요인

후진타오 지도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시기를 살펴보았을 때, 중국의 국내 반일여론 강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일본 측의 요인이 두드러졌던 해는 2005년, 2010년, 그리고 2012년이다. 우선, 2005년에는 일본 신보수세력의 대외정책 노선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일 간의 이해관계 충돌지점이 대폭 확대되었다.⁷ 앞서서도 중일 간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2004년부터 본격화되

⁷ 손기섭은 고이즈미 총리 등 신보수세력의 대외정책 노선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평화헌법 개정, 미일동맹 강화, 실질적 방위력의 확충, 안보리 상임위 진출, '72년 체제'의 중일관계 탈피 등을 꼽고

고 있던 센카쿠/다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분쟁이라는 쟁점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2005년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와 방위정책 문제 등으로 보다 넓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2005년 봄 고이즈미(小泉純一郎) 내각은 유엔안보리의 확대방안을 통해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했으며, 2004년 12월 발표한 방위계획대강 개정안에서는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이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손기섭, 2006: 127-131). 나아가 일본 문부성은 후쇼사(扶桑社)의 새로운 역사교과서까지 승인했다. 이러한 일본의 대내외 정책노선 변경 징후는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 중국 국내에서도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위 진출 반대 서명운동을 시발점으로 북경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반일시위가 진행되었다(김성철, 2016: 12). 중국 당국은 국내 대중들의 반일감정을 자제시키고자 노력했으나, 일본발 악재가 잇따라 사태 진정이 쉽지 않았다.⁸

2010년에는 중국의 국력상승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의 대응이 강경한 양상으로 표출되었고,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발표가 초래되었다. 2010년 9월에는 센카쿠/다오위다오 열도 근해에서 중국어선이 일본의 해양보안청 경비선을 고의로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가 중국어선의 선장을 구속하자, 중국은 일본 측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일본 시민 4명을 군사시설 촬영 혐의로 억류하는 등 일본에 압력도 행사했던 것이다(Rosenbluth, 2011: 51). 유엔에서까지 일본의 대처를 문제시했다. 2010년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주권, 통일, 영토보존과 같은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고 밝혔던 것이다(김성철, 2016). 이에 칸 나오토 내각은 중국선박 선장을 즉시 석방하는 등 사태를 조용히 수습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했다. 덧붙여, 중일 간의 갈등에 대한 칸 나오토 내각의 조치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그해 연말에는 민주당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있다. 중일관계와 관련된 ‘72년 체제’란 1972년의 중일공동성명, 1979년의 중일평화우호조약을 기초로 성립된 중일관계의 대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중일 간의 정치외교 정상화, 경제교류 긴밀화, 미중일 간의 외교안보 제휴 등을 지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손기섭, 2006: 113).

⁸ 이어 2006년부터 중일관계는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그해 9월 아베 총리의 취임으로 중일 간의 갈등이 완화되었으며, 원자바오 총리의 방일(2007. 4), 후진타오 주석의 방일(2008. 5) 등으로 양국 간 정치관계가 정상화되어갔다고 하겠다. 2009년에도 동아시아공동체 건설, 중일우호협력관계 구축을 중시하는 하토야마 내각의 출범으로 중일 간의 불협화음이 크지 않았다(김성철, 2016).

약 1/3로 급감했던 것이다. 자민당도 재집권을 위해 주변국에 대한 영유권 주장 관철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이러한 국면에서 2011년 여름 자민당 의원 3명이 독도 방문을 위해 한국에 방문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둔 2012년 가을부터 일본의 대중정책은 중국과의 이해관계 충돌을 빚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무엇보다 2012년 9월에 일본 정부는 센카쿠/다오위다오 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2012년 9월에 민간인으로부터 센카쿠 열도의 등대를 구입했던 것이다. 이것은 군사위협을 수반한 중국의 강경한 대응으로 귀결되었다. 그해 말 중국군 항공기가 센카쿠/다오위다오 상공을 비행했으며, 이듬해 1월에는 동중국해에서 중국해군 프리깃함이 일본 함정에 사격관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하기까지 했던 것이다(김성철, 2016: 10). 아울러, 2013년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견제를 추구할 것이라는 일본의 정책은 명확했다. 2012년 12월 말의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했고, 국가적 자존심과 힘의 회복을 대외정책의 핵심의제로 내건 아베(安倍晋三) 내각이 출범했기 때문이다(Inoguchi, 2013: 101-106). 센카쿠/다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아베 내각의 입장은 기존의 노다 내각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Inoguchi, 2014: 104). 2014년에 들어서야 중일관계는 봉합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수 있었다. 2014년 11월 10월 북경 APEC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은 중일관계의 개선을 모색하는 데 합의했다. 이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해공군 간 연락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 합의는 그 이듬해 5월 말 중일 간 군사회담에서도 재확인되었다(김두승, 2016: 52-53).

2. 국내정치국면

다음으로 권위 제고의 필요성이 강한 신지도부의 권력 강화기는 후진타오 지도부와 시진핑 지도부의 집권 2~3년 차인 2004~2007년과 2014~2017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양한 세력이 공존하는 집단지도체제의 특성상,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에게는 집권 직후부터 타 세력을 약화시켜야 하는 권력투쟁이 불가피하다. 최소한 경쟁세력을 통제 가능한 범위로 약화시키지 않는 한, 여러 방향에서의 견제에 의해 권력행사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2002년 11월 국가주석

에 취임한 후진타오는 장쩌민 전 주석에게 군권을 이양받지 못하고 쑹칭홍(曾庆红) 등 장쩌민 세력(상하이방)의 견제를 받는 가운데 임기를 시작했다. 당 중앙의 “핵심”이라고 불렸던 장쩌민과 달리 후진타오 주석은 퇴임 시까지도 “핵심” 칭호를 얻지 못했다. 후진타오 집권 초기만 해도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는 장쩌민이었던 것이다(공봉진, 2017: 402-403).

먼저, 후진타오가 지도자 역할을 위해 권력을 집중적으로 확대한 시기는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의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후진타오 주석은 자신의 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고, 장쩌민 주석에게 군권을 이양 받음으로써 비로소 당, 정, 군을 모두 장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국가주석에 취임한 직후부터 후진타오 주석은 반부패정책을 통해 타 세력들을 견제했으나, 2004년 가을에 들어서야 권력을 확대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 2004년 9월에야 후진타오 주석은 장쩌민 주석으로부터 군권의 일부를 이양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달 장쩌민 전 주석은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후진타오 주석에게 넘겨주었다. 이때로부터 후진타오의 정치적 행보는 적극적으로 변모했는데, 같은 달의 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6기 4중전회)에서 자신의 통치이념을 구성하게 될 조화사회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이듬해인 2005년 9월 후진타오 주석은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까지 장쩌민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는 후진타오 주석이 비로소 군권을 공식적으로 장악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그와 함께, 그는 자신의 통치이념을 국가전략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성과를 얻고자 노력했다. 경제성장보다는 지속가능성과 평등에 무게를 두는 성격을 가진 후진타오 주석의 정책노선이 2005년 10월에 열렸던 16기 5중전회에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 11차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다(Sach, 2006). 아울러 16기 5중전회에서는 후일 후진타오의 사상적 업적으로 남거지는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세계 구축의 구호도 제시되었다.⁹

이어 2006년과 2007년도 후진타오 주석의 권력 강화 국면의 후반에 놓여 있

⁹ 이러한 후진타오의 정책노선은 전임자인 장쩌민 전 주석과의 노선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였다. 그의 정책노선은 보다 정통주의적이고, 대중융합적이었으며, 외교정책 부문에서도 미국과의 거리두기를 시도했다.

었다. 2006년에도 후진타오 주석의 권력 강화 동향은 계속되었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6년 9월 상하이방의 대표적인 인사인 천량위 상하이시 당서기를 부패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상하이방을 추가로 약화시켰고, 그 다음에는 바로 다음 달에 열린 16기 6중전회를 통해 자신의 통치이념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다만 2007년에 들어서서는 후진타오 주석의 권력 강화 동향은 더 이상 극적인 형태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의 정치적 성과는 2007년 17기 전국 대표대회에서 상무위원을 1석 더 가져온 데 불과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진타오 주석은 중앙조직부장에 자파의 리위안차오(李源潮)를, 상하이시장에 위안순칭(袁純清)을 앉히면서 점진적으로 세력을 확대할 수는 있었다. 또한 제한적인 성과나마 2017년 10월의 17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이 지도이념으로 반영되었다.

다음으로,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 노력도 국가주석 취임 후 2년차인 2014년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시진핑 주석은 후진타오 전 지도부에 비해 권력 강화의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이 당권과 군권을 동시에 시진핑 주석에게 이양했던 것이다. 그러나 통상 상무위원이 맡는 직책인 국가부주석을 공청단파의 리위안차오가 맡는 등 후진타오 전 주석의 영향력 행사 시도가 있었고, 이에 시진핑도 집권 초기부터 반부패정책을 추진하는 등 다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을 두었다(공봉진, 2017: 408-409). 특히, 2013년 말부터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 노력은 반부패운동을 통한 여러 세력에 대한 다발적인 견제로 본격화되었다. 전직 상무위원에 대한 부패혐의 조사라는 이례적인 사건이 2013년 12월에 발생했다. 범 상하이방에 속하는 저우융강(周永康) 전 상무위원의 비리혐의가 일반에 공개되었던 것이다. 또한 2014년 6월 30일에는 쉬차이허우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대한 조사 착수도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시진핑의 군 장악력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저우융강과 쉬차이허우(徐才厚)에 대한 조사결정을 지지한다는 결의를 인민해방군 각 군구가 발표했던 것이다(조영남, 2015: 141-142). 후진타오 전 주석의 공청단파도 2014년 12월의 링지화(令計劃) 전 통전부장에 대한 부패혐의 조사 및 면직조치로 가시화되었다. 이처럼 2013년 말부터 2014년 시진핑의 정치행보는 범 상하이방, 군부, 공청단파를 상대로 한 다발적인 권력 강화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2015년에도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권력 강화 사업을 일단락짓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그해 6월 저우용캉에게 무기징역이 언도되었고, 5중전회를 앞둔 10월에는 저우용캉의 측근들에 대한 사법조치도 가속화되었던 것이다. 가장 강력한 경쟁세력이었던 상하이방을 약화시킨 결과로, 시진핑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었던 5중전회에서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과 중고속성장을 추구한다는 기조를 13차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었다. 동시에 그는 당중앙의 “핵심”으로까지 호명되었다.¹⁰

2016년에도 지속된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 노력은 2017년에는 결속 수순에 접어들었다. 2016년 여름 시진핑은 링지화에 대한 사법조치를 마무리 짓고, 11월에는 세 곳의 성급 행정단위에서 검찰위원회 제도를 시범 실시함으로써 국가감찰체제의 구축도 추진해가기 시작했던 것이다(공봉진, 2017: 410-414). 이러한 권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은 2017년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이 당헌에 삽입됨으로써 최종적 목표에 도달했다.

IV. 중국의 청일전쟁·중일전쟁 역사 활용추이와 동향

1. 청일전쟁에 대한 활용추이

『인민일보』에서 청일전쟁을 주제로 다루는 기사는 해군확보의 중요성, 해군력 건설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경향을 띄며, 지도부의 단결에 기초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강조한다. 역사의 활용에 있어서는 역사적 현상과 그로부터 얻어낼 교훈이 함께 중요하다고 볼 때, 그 기사가 정당화하는 정책 방향이 무엇인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고려에서, 청일전쟁의 역사적 기억이 해군건설의 필요성이라는 교훈과 맞닿아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¹⁰ 문화대혁명을 초래한 강력한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덩샤오핑은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했으나, 분할이 야기할 결정의 지체, 통일성의 부재와 같은 단점도 예방하기 위하여 지도부 내에 단결의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덩샤오핑은 장쩌민을 중심으로 후계지도부가 단결할 것을 주문하고, 그러한 단결의 중심이 될 장쩌민을 ‘핵심’이라고 칭했다(안치영, 2016: 392-394).

참고로, 청일전쟁은 중국 내에서 통상 ‘갑오전쟁(甲午戰爭)’이라고 불린다.

청일전쟁의 역사적 교훈으로 해군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2003년 이후의 시기 중 처음으로 관련 기사가 등장한 2004~2005년에도 보여졌다. 2004년 7월 18일의 웨이하이 소재 청일전쟁기념관에 대한 방문기는 세계 제4위의 북양해군이 궤멸되고 시모노세키 조약의 체결로 영토 할양 등의 강화조건을 받아들여야 했던 청일전쟁을 굴욕적인 역사로 제시했다. 그로부터 이 방문기는 청일전쟁기념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가적 해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뉘앙스를 표출했다. 이 기념관이 중국의 해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 등에서 설립되었다고 언급한 것이다(『人民日報』 04/07/18). 또한 2005년 8월 9일의 한 기사 역시 일본문부성이 일본 우익의 신역사교과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그것이 청일전쟁의 기원과 성질을 청국의 대일본전제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기사는 당시 일본의 중국위협론도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에 의해 만들어진 허위였다고 일본 내의 중국위협론을 비판하고, 청일전쟁 시기 일본의 대중정책은 중국의 허약함을 전제로 추진된 것이라면서 국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사적 교훈으로 제시했다(『人民日報』 05/08/09).

그림 1에서 보듯이 청일전쟁을 주제로 하는 기사는 2014년에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2014년은 청일전쟁 발발 120주년이 되는 해이자 해군건설이 강조된 해였으며 국내적으로는 시진핑으로의 단결이 강조되던 해였다.

특기한 것은 2014년 청일전쟁 주제의 기사들은 해군력 건설의 필요성만이 아니라 정치적 지도력의 필요성을 청일전쟁의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7월 24일 자의 “전쟁과 평화의 변증법을 명심하자(牢記戰爭與和平的辯證法)”는 청일전쟁 120주년을 계기로 게재된 기사로서 청일전쟁은 중국 근대사의 의미 깊은 기원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人民日報』 14/07/24). 황해전투를 계기로 중일 간의 위치가 역전된 결과, 동아시아 질서가 다시 빗어졌다는 것이다. 이 글 역시 2004~2005년 즈음의 청일전쟁 기사와 유사하게 청일전쟁 패배의 교훈을 당시 중국의 허약함에서 찾았고, 중국의 부흥이라는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청일전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함의를 강조하는 면모를 보였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다가갈수록 압력과 위험도 커지므로 물질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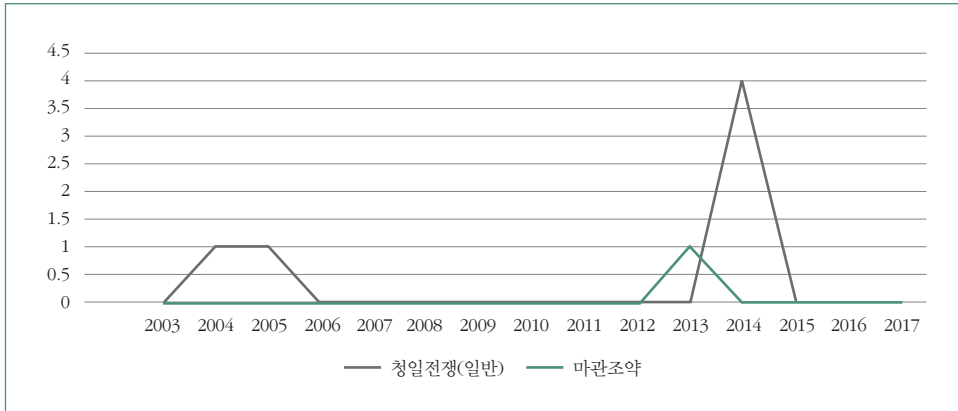


그림 1 『인민일보』의 청일전쟁을 주제로 하는 기사의 추이(2003~2017)

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중국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8월 8일의 기사 역시 그 연장선에서 청일전쟁과 같은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도부 내부의 전략적 의지와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경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와 군사학과 교수에 의해 쓰여진 이 글은 청나라의 청일전쟁 패배원인을 조정 내의 의견 불일치에 따라 파병이 늦어진 점 등에서 찾았고, 이러한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단결과 결의의 중요성을 제시했던 것이다(『人民日報』 14/08/08). 8월 24일의 청일전쟁 120주년 토론회 기사에서는 청일전쟁의 정치적 함의와 해군력 건설의 필요가 모두 다뤄졌다(『人民日報』 14/08/24). 판찬룽(范長龍) 부주석은 갑오전쟁의 교훈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함의에 해당할 문제인 국가정치안전, 국가통일목표, 주권 및 영토 안정 문제를 거론했고, 우성리 해군사령관은 강력한 해군 건설의 필요성을 병행 강조했던 것이다.

덧붙여, 시모노세키 조약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도 별도로 주목해볼 수 있다. 시모노세키 조약은 센카쿠/다오위다오와 대만의 할양을 내용으로 했던 조약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사는 좀 더 세부적인 결론이나 교훈을 제시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시모노세키 조약에 대한 관련 기사는 2013년 5월의 관련 기사가 유일했다. 이 기사는 일본의 센카쿠/다오위다오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기사였다. 이 기사는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할양된 대만 부근 도서에는 센카쿠/다

오위다오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중국정부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1941년에 폐기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에 의해 일본이 접수한 팽호열도도 중국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부터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역사적 소재는 외교적 함의 도출에 한정되어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중일전쟁에 대한 활용추이

앞에서 『인민일보』의 기사 내 중일전쟁에 대한 주제를 중일전쟁 일반, 7.7사변, 남경학살로 구분하였다. 그에 따라서 각각의 주제가 어떠한 교훈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중일전쟁에 대한 관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1937년에 시작하여 1945년까지 진행된 중일전쟁은 중국 내에서는 통상 “항일전쟁(抗日戰爭)”으로 불리고 있다.

첫 번째로, 중일전쟁 전반에 대한 기사는 2005년과 2014~5년에 집중적으로 등장하였으며, 화평발전의 기초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마오쩌둥(毛澤東) 이래 여러 지도자들이 중일전쟁을 중국공산당의 승리로 규정한 바탕에서, 중일전쟁은 군사적 대비의 필요성보다는 전후 질서의 강화 발전이나 갈등 방지를 위한 건설적 노력의 필요성이라는 교훈과 정치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2005년의 예를 들면, 2005년 8월 14일에 진행된 후진타오 주석의 중국인민 항일전쟁기념관 참관에 대한 기사는 후 주석의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을 게재했다(『人民日報』 14/08/15). 이 기사는 후 주석이 중일전쟁은 중국의 위대한 승리였으며, “역사를 명심하고, 과거를 잊지 말고, 평화를 소중히 하며,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牢記歷史, 不忘過去, 珍愛和平, 開創未來).”라는 언급을 제시했다. 이는 중일전쟁으로부터 얻어낼 교훈의 방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서, 중국 내에 반일집회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배경에서도 중일전쟁의 교훈은 후진타오 주석이 제시한 방향에서 강조, 재강조 되었다. 2005년에 잇달아 개최되었던 중일전쟁 승리 60주년 토론회, 중일전쟁 승리 기념 대규모문예공연 등에 대한 기사 역시 ‘역사를 잊지 말고 미래를 창조하자’ 등의 요구에 따른 정책방향을 정당화했으며, 화평발전의 노선이 지속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제시했다(『人民日報』 05/09/02, 05/09/03).

한편, 2014~2015년의 중일전쟁 일반 관련 기사 역시 이러한 경향을 보였다. 중일관계가 좋지 않던 2014년 초의 남경학살국가추모일에 관한 기사는 남경학살 시 30만 명의 동포가 살해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역사를 명심하는 목적은 그러한 비극을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하려는 데 있다고 제시하고 일본의 변화를 촉구했다(『人民日報』 14/02/28).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으로 제한적이거나 중일관계 개선이 모색되는 배경에서 제시된 12월의 관련기사는 중일전쟁 시기 사상자 및 피해자 연구총서의 발간을 소재로 하여 중국공산당이 단독으로 항일활동을 개시한 1931년부터 1945년간 중국이 받은 피해를 설명하고, 고난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중일관계 개선의 신국면을 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人民日報』 14/12/10). 가장 주목되는 것으로, 2015년 9월 3일의 중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대회의 시진핑 연설이 9월 4일 자 『인민일보』에 전재되었다. 여기서 시진핑은 중일전쟁으로 인한 중국인들의 인명피해가 3,500만 명에 이른다는 점이 강조됨과 함께 중국은 화평발전 노선을 견지할 것이며 군사적 팽창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人民日報』 15/09/04).

두 번째로, 중일전쟁이 촉발된 7·7 사변에 관한 기사의 빈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으며, 중일전쟁 일반 관련 기사의 발표추이와 달리 2007년에 주로 발표되었다(그림 2 참조). 7·7 사변은 그로부터 70주년이 되는 2007년에만 집중적으로 다뤄졌던 소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7·7 사변을 소재로 제시하는 교훈은 중국 내부가 단결하여 국가부흥에 힘쓸 것 등 일반적 요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일례로 2007년 7월 8일에는 7·7 사변 70주년을 맞아 베이징, 시안, 선양, 웨이린 등 각지에서 개최된 각종의 활동이 다루어졌다(『人民日報』 07/07/08). 이 기사는 유관인사의 입을 통해 7·7 사변을 기념하는 의미는 국치를 잊지 않기 위한 것과 중국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자는 데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남경학살을 다루는 기사의 추이는 중일전쟁 일반과 큰 차이가 없으며, 기사의 교훈 혹은 함의 역시 화평발전의 기조와 충돌하지 않았다. 남경학살 관련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 그러한 비극의 방지, 일본의 책임 있는 태도에 대한 촉구 등의 필요성을 남경학살 관련 기사는 그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2005년 이전에도 일본 정치인의 실언에 대한 한국외교부의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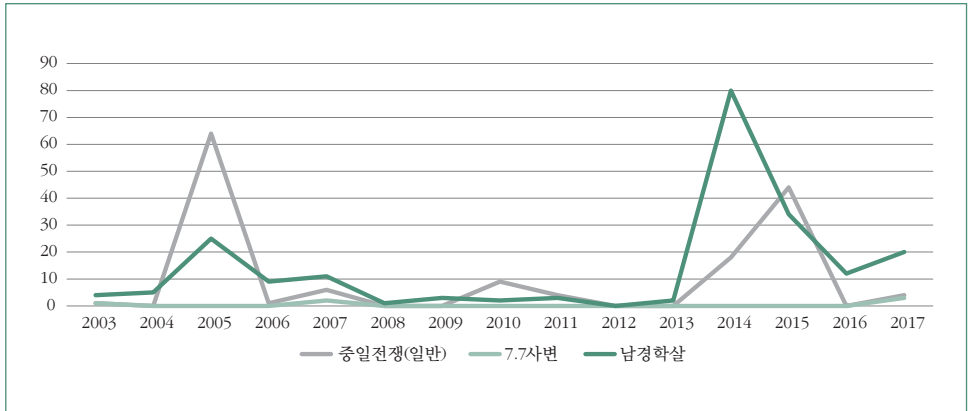


그림 2 『인민일보』의 중일전쟁을 주제로 하는 기사 추이(2003~2017)

을 인용하는 등 중국은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요구하고 있었다. 2005년 초에는 역사교과서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관련 심층취재가 게재되었다(『人民日報』 05/01/21). “일본, 두 가지의 역사가관이 대결하고 있다(日本, 兩種歷史在較量)”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후쇼사 역사교과서의 낮은 시장점유율(0.3%)과 함께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진 동경출판 역사교과서의 남경학살 관련 내용이 후쇼사의 그것과 비교되어 제시되었다. 남경학살이 국제적으로는 남경대학살이라고도 불림을 주해에 명기한 동경출판과 달리 후쇼사 역사교과서는 남경학살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 기사는 이러한 현상을 일본의 역사교과서 부문의 동향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문 정도와 연결했다. 일본에 대한 어떠한 강경 대응을 정당화하는 논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 해 6월 10일 자 『인민일보』의 기사 역시 역사보존의 필요성 정도를 강조하는 데 그쳤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관한 자료보다도 일본군의 점령 초기에 발생한 1937년 남경학살에 대한 자료가 더욱 적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남경학살 관련 유적은 물론 항일전쟁 일반의 유적을 보존함으로써 피눈물이 맺힌 역사를 자손들이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人民日報』 05/06/10).

다만, 2014년에 다시 급증한 남경학살 관련 기사는 화평발전의 기초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등 과거의 연속 선상에 있으면서도 국력 강화 필요성도 정당화하는 논의와 결합되는 다소 간의 변화도 보였다. 2014년에 남경

학살 관련 기사가 대폭적으로 강화된 계기가 된 사건은 2014년 2월 28일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남경학살 발생일(12. 13)을 국가적 추모일로 지정한 것이었다(김성철, 2016: 4-5). 2월의 한 기사는 일본의 NHK 경영위원인 하쿠다 나오키(百田尚樹)가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소재로 중국외교부 대변인의 일본의 역사반성 촉구 발언을 소개했다(『人民日報』 14/02/06). 4월 5일 자의 기사도 남경학살을 은폐하려는 일본 측의 동향에 대한 국제사학계의 다양한 비판을 소개로 인류의 정의와 평화를 지키고 역사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일본 측의 반성을 촉구했다(『人民日報』 14/04/05). 아베 내각이 역사를 책임지는 태도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남경학살피해자 국가추모일 지정에 따른 추모의식을 다룬 2014년 12월 14일의 기사이다. 시진핑 주석 등 중국공산당 중앙,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임위원회, 국무원, 전국정치협상회의, 중앙군사위 소속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한 이 행사를 다루면서, 이 기사는 남경학살에 대한 추모로부터 인류평화와 발전의 숭고한 사업의 의미를 기린다고 언급하면서 중일전쟁에 대한 기존의 정치적 해석을 재확인했다(『人民日報』 14/12/14). 또한 그때 중국이 충분히 강했다면 남경학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언급을 통해 국력강화의 필요성도 시사했다. 2016년 12월 남경학살피해자 추모식에 대한 기사는 남경학살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한 것은 중국공산당의 영도에 따라 중국 국민이 단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人民日報』 16/12/14). 이처럼 일본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대응방향과 함께 그 외의 새로운 목표(국력강화, 당성강화)와 연결되는 약간은 열린 논의를 제시하는 데 남경학살의 역사적 기억은 활용되어 갔다.

3. 적대적 역사 활용의 동학

앞의 기술 속에서 간략히 제시한 청일전쟁과 중일전쟁에 대한 『인민일보』의 기사들의 전체적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적대적 대일기억 활용이 보다 강하게 이루어진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3장에서 언급한 중국의 대내외적 조건이 이러한 전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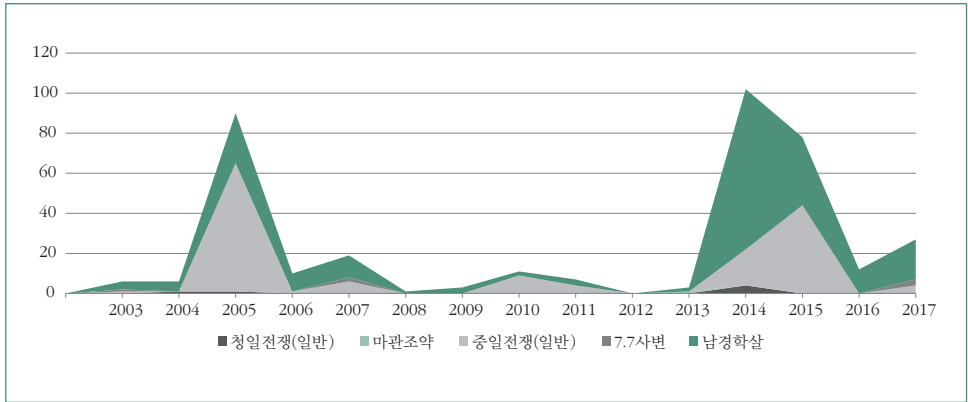


그림 3 『인민일보』의 청일전쟁 및 중일전쟁을 주제로 하는 기사 추이(2003~2017)

추이의 변화와 정말 관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때, 대외적 조건은—중국이 72년 체제에서 미해결 사안으로 두기를 바랬던—센카쿠/다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일본의 실효적 지배 강화 노력 혹은 우경화 등 중국 국내의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일본발 요인을 말한다. 이러한 요인이 등장할 경우, 중국의 국내 민족주의 여론은 확대되고, 중국 당국은 국내적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에서 또는 그를 통해 대일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역사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국내 변수는 정치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비판을 예방하려고 하는 새로운 지도부의 권력 강화 국면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정치 지도자는 국내 청중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으려는 위치에서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문제를 무시하기보다는 자신 혹은 당국이 역사문제를 원칙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의 출현 여부와 중국의 적대적 대일 기억의 활용추이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양자를 함께 나타내면,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이러한 정리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 중국의 일본에 대한 적대적 역사의 전략적 활용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설명해준다. 첫째, 일본의 대중정책이라는 외부적 요인만으로는 중국이 청일전쟁과 중일전쟁 역사를 보다 강도 높게 활용한다고 하기 어렵다. 표 1에서 보듯이 2010년, 2012년, 2013년 등 대내외 요인 중 외부 요인만 뚜렷했던 시기에, 『인민일보』에서 청일·중일전쟁이 주제로 다루는 경향은

표 1 중국의 적대적 대일 기억 활용에 대한 영향요인과 활용추이

구분	일본의 정책에 따른 중국 내부 민족주의 확대	지도자의 권력 강화기	청일·중일전쟁 활용추이
2003	-	-	6
2004	-	○	6
2005	○	○	90
2006	-	○	10
2007	-	○	19
2008	-	-	1
2009	-	-	3
2010	○	-	11
2011	-	-	7
2012	○	-	0
2013	○	-	3
2014	○	○	102
2015	-	○	78
2016	-	○	12
2017	-	○	27

확대되지 않았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이러한 약한 관계는 뚜렷하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금지 등 일본의 굴복을 얻어내기 위해 강경한 대응을 했던 것에 비한다면, 역사문제를 주제화한 『인민일보』 기사는 11건에 불과하다. 물론, 2010년 센카쿠/다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중국 측 강경 대응의 배경에는 권력투쟁과 같은 국내적 요인이 있던 것으로 논의되기도 하지만(아마코, 2014: 115-122), 이는 주요한 권력투쟁이 아니었다. 중국 당국 내의 입장차 해외자원 확보와 국제협조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라고 하는 정책문제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둘째, 적대적 대일 기억 활용의 고조 직후에는 권력 강화 국면이라는 내부적 요인만으로도 청일·중일전쟁 역사의 활용 정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본발 외부 요인은 약했지만 권력 강화 요인이 존재하던 시기는 2004년, 2006~2007년, 2015~2017년이었다. 이 중에서 적대적 대일 기억의 고조가 선행되지 않은 2004년에는 적대적 역사의 활용이 강화되는 추세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적대적 대일 기억이 높은 수준으로 활용된 시점 직후의 시기인

표 2 중국의 적대적 대일 기억의 영향요인과 활용 정도

구분	외부적 요인만 작용	내부적 요인만 작용	외부, 내부적 요인 동시 작용
해당 연도	2010, 2012, 2013	2004, 2006~2007, 2015~2107	2005, 2014
연평균 활용 건수 (인민일보)	4.67	25.3	96
활용 정도	저	중	고

2006~2007년과 2015~2017년에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청일전쟁과 중일전쟁 등 적대적 역사가 『인민일보』에서 제시되었다. 내부적 요인만 작용한 시기에는 적대적 역사의 활용 정도가 직전의 고조기보다 감소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내부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보다는 높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의 뜻은 권력 강화의 내부적 요인은 앞선 시기에 고조된 적대적 역사의 활용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권력 강화 요인에 따라 직전 시기의 적대적 역사 활용이 중간 정도의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향은 중국 당국의 적대적 대일 역사 활용이 국내여론에 대한 수세적인 대응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권력 강화 국면에서는 대내적 권위의 실추를 우려하여 지도자가 직전의 시점에 제시한 원칙적 입장을 가급적 견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일본발 국내여론 악화라는 대외적 요인과 권력 강화 국면이라는 대내적 요인이 결합될 때에는 지도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청일·중일전쟁 역사의 활용 정도가 대폭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5년과 2014년이 그러한 대폭적 강화의 예이다.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이 모두 존재했던 이 두 해에는 청일·중일전쟁에 대한 활용기사 건수가 각각 90건, 120건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지도자의 권력 강화 국면과 중일관계 악화에 따른 민족주의 정서의 확대가 겹쳐졌을 때, 중국 당국이 청일전쟁과 중일전쟁 등 역사적 논의를 통해 대내외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바를 의미한다. 즉, 권력 강화기에 중국의 지도자는 중일관계에 따른 민족주의 정서의 확대에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했던 것이다.

추가적으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중일전쟁에 대한 논의가 최고점에 도달한 2005년과 2014~5년의 시기를 비교할 때, 2014~2015년의 경우에는 남경대학

살에 대한 기사 건수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적 변화는 2014년 초 매년 12월 13일을 남경학살피해자 국가추모일로 지정한 전인대의 결정과 관련되어 있다. 남경학살에 대한 논의는 2014년을 기점으로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남경학살에 대한 논의는 전술했듯이 교훈이 열린 논의로서 기존의 대일 반성축구는 물론, 국내적 결집과 군사력 강화를 모두 정당화한다. 이 점에서 남경학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중일전쟁 담론의 비중 있는 요소로 등장한 것은 대일관계에 대한 중국 당국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

V. 결론

이 글에서는 “중국 정부는 어떠한 조건에서 일본과의 적대적인 역사를 보다 강하게 활용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인민일보』의 청일·중일전쟁을 주제로 한 기사의 강화 추세 및 논의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가장 중요한 결과는 중국의 민족주의 여론을 고조시키는 일본의 대중정책이라는 외부요인, 국내적 비판에 대한 민감성이 존재하는 권력 강화 국면이라는 내부요인이 동시에 존재할 때에 일본에 대한 적대적인 기억의 강화가 뚜렷이 일어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데 있다. 다음으로는, 신지도부의 권력 강화 국면 등 중국 내부요인은 후진타오, 시진핑 시기 모두에서 일본에 대한 적대적 역사의 활용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양상은 역사 활용에 있어 중국 지도자의 기본적인 동기는 권력 강화 시기의 사회적 비판과 국내민심에 대한 방어적 고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기한 것은 일본 변수의 외부요인만으로는 청일·중일전쟁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데 있다. 일본의 정상국가화 노력에 따른 중국 사회의 반일정서 확대와는 별개로 중국 당국의 정치적 필요가 있을 때에야 중일 적대사의 공적 재생산이 이뤄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중국 당국의 역사 활용은 1차적으로 중국 국내 정치적 동기에 따라 추구되며, 그러한 동기가 존재하는 배경에서 2차적으로 중일관계로 인해 국내 반일여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때 보다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의 일본에 대한 적대적 역사 활용은 대내

적 차원의 중국 당국의 자기 방어적 필요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중국의 청일·중일전쟁에 대한 역사 활용 동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논의 내용과 특성을 파악할 수도 있었다. 주목할 점은 청일전쟁에 대한 기억은 오히려 해군력의 강화 등 일반적으로 보다 갈등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측면이 있으며, 중일전쟁에 대한 기억은 그것이 승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범한 접근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일전쟁에 대한 공식적 논의는 화평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태도를 강조하고, 전후 질서 속에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서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국에게 적 역할을 부여하는 국가적 담론이 단순히 흡스적 문화의 요소라고 볼 수만은 없으며, 성찰적 여유를 통해 칸트적 문화를 지향하는 내러티브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이론적 함의를 제시한다. 모두 적대의 역사적 기억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테마는 청일전쟁에 대한 중국의 기억과 같이 흡스적 대안과 결합되고, 다른 테마는 중일전쟁에 대한 논의와 같이 칸트주의적 정책방향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역사해석의 결과로 역사적 테마들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교훈들 간의 관계도 상당 부분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전쟁의 승패와 전쟁기억으로부터의 교훈 간의 상관관계도 보여진다. 패전으로 끝난 것으로 평가되는 청일전쟁은 보다 갈등적인 대안을, 승전으로 규정된 중일전쟁은 보다 포용적인 대안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패전의 기억은 자국의 패배로 만들어진 지역·국제질서를 어떻게 바뀌나갈 것인가라는 문제의식과 결부되면서, 현상 타파적인 입장을 도출하는 데 적절한 주제일 수 있다. 한편, 승전의 기억은 승전국으로서 이익이 보장된 현재 질서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문제의식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비록 중일전쟁 이후 구축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당초에는 중국을 배제했었으나, 미중관계 개선 이후 중국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승전국으로서의 지위를 향유할 수 있는 체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현재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상당 부분 현상유지적일 수 있다. 이 점에서,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적대적 기억이 담긴 중일전쟁에 대한 담론을 활발히 재생산한다고 해도 그것이 단순히 현상타파

적인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중일전쟁 전반이 아니라 전투의 패배로 초래된 남경대학살의 기억은 현재 질서에 대한 만족감과 불만 사이의 복잡한 마음을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 남경대학살은 일본에 대한 반성 촉구와 더불어, 국내적 단결, 군사력 강화의 대응방향을 모두 정당화하며, 역사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비폭력적 방식에서 폭력적 방식에 이르는 폭넓은 대안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역사 활용 동학과 관련해,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중국의 국가지도자가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본과의 갈등을 동시에 대면하게 되면 중국 국내대중의 역사문제 해결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국내적 인정투쟁을 경험한다는 바를 함의한다. 권력 강화 국면에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부패를 척결하고 자신의 이념을 관철하는 엘리트 정치의 측면에서 강력해보일 수 있으나, 대중정치의 맥락에서는 오히려 취약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주변국들이 중국 지도부의 권력 강화 시기에는 중국 내부여론의 반응을 민감히 고려하는 대중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바를 함께 시사한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중국 대외정책의 유연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중국은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완고한 입장을 표출하였었다. 2013년 말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기점으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일본에 맞서 첨예하게 전개했고, 중국 국내의 반일여론도 고조되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으로의 권력 강화 작업이 마무리된 최근에는 중일관계의 개선도 모색되고 있다. 2018년 5월 일본을 8년 만에 방문한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아베 총리, 아키히토 국왕을 면담하고, 중일관계 정상화와 충돌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향후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이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은 중일관계의 적대적 역사가 높은 수준으로 제기되는 국면이 다시 나타나더라도 국내 권력 강화 요인에 따라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세월이 지나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다면, 중일 간의 상호작용으로 촉발된 적대적 과거 역사의 확산이 제동되기 어려운 국면이 중국 정치 특유의 권력 강화 과정에 따라 다시금 조성될 수 있다. 만약 그 시기의 미래 중국이 현상 타파적 논의를 제시하게 된다면, 그 논의는 남경대학살의 강제로부터 19세기

말 청일전쟁이나 치욕의 경험이 강조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러한 미래의 상황 대비해서 19~20세기 중국이 겪은 피해의 역사도 칸트적, 공동체적 정책대안과 연결시키기 위한 역사학적, 철학적 논의를 지금부터 개시해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글은 역사적 기억으로부터 얻어지는 정책적 교훈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아니다. 청일전쟁과 중일전쟁의 역사적 테마가 『인민일보』에서 제시되는 추세를 중심으로 검토했으므로, 중국 당국이 그를 통해 제시하는 정책방향의 변화까지 체계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한 한계를 갖는 것이다. 정책연구의 관점에서 중국 당국이 역사적 주제로부터 정당화하려는 정책방향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향후 연구방향은 중일관계의 역사에 대한 논의들 속에서 제시되는 교훈을 대립과 포용의 방향 등으로 유형화하여, 그로부터 중국의 정책방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17년 12월 18일 | 심사일: 2018년 6월 7일 | 게재확정일: 2018년 7월 30일

참고문헌

- 가시하라 도쿠시 저. 이상복 역. 2017. 『남경사건』. 어문학사.
- 강현두·주어행이·허진. 1998. “중국 언론에 나타난 남·북한 이미지 비교분석 연구.” 『한국언론학보』 43(1), 37-75.
- 공봉진. 2016. 『시진핑 시대, 중국정치를 읽다』. 한국학술정보.
- _____. 2017. “중국 지도자 교체시기의 권력강화와 정치역학.” 『동북아문화연구』 제51집, 393-424.
- 김두승. 2016. “아베 정권의 대중정책과 한국 - 견제와 타협의 이원적 접근전략.”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1집, 31-60.
- 김성철. 2016. “중일관계의 갈등과 협력: 안보와 경제의 연계.” 세종연구소.
- 김홍규. 2014. “시진핑 시기 중국외교와 중일관계 분석.”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8집, 3-41.
- 모리 가즈코 저. 조진구 역. 2006. 『중일관계: 전후에서 신시대로』. 리북.

- 밸러리 허드슨 저. 신옥희·최동주·조운영·김재천 역. 2009. 『외교정책론』. 을유문화사.
- 서진영. 1992. 『중국혁명사』. 한올아카데미.
- 손기섭. 2006. “고이즈미 정권의 동아시아 외교와 중일관계.” 『한일군사문화연구』 제4집, 111-137.
- 신옥희. 2017. 『삼각관계의 국제정치: 중국, 일본과 한반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안치영. 2016. “중국공산당 지도부에서 ‘핵심’의 의미와 시진핑의 정치적 지위.” 『중앙사론』 제44집, 385-423.
- 아마코 사토시 저. 이용빈 역. 2014. 『중국과 일본의 대립: 시진핑 시대의 중국 읽기』. 한울.
- 이동률. 2015. “중국의 해양영유권 분쟁에 대한 전략과 요인: 다오위다오/센카쿠열도 분쟁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9집 제1호, 49-87.
- 이정환. 2014. “현대일본의 보수화 정치변동과 동아시아 국제관계” 『의정연구』 제20권 제1호, 6-33.
- 이희옥. 2015. “시진핑 시기 반부패운동의 정치논리: 시장, 법치, 거브너스의 관계.” 『중소연구』 39(1), 17-48.
- 조영남. 2015. “시진핑 ‘일인체제’가 등장하고 있는가?” 『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3호, 127-153.
- _____. 2017a. “중국 최고 지도자의 권력 공고화: 장쩌민의 사례.” 『중소연구』 제41권 제3호, 7-44.
- _____. 2017b. “중국 후진타오와 시진핑의 권력 공고화 비교.” 『국제·지역연구』 제26권 제4호, 1-35.
- 주디스 콘버그(Judith F. Kornbergr)·존 파우스트(John R. Faust) 저. 이진영·민병오·조혜경 역. 2008. 『중국의외교정책: 정책, 과정, 전망』. 명인문화사.
- 최윤규·최용준. 2013. “중국 3대 언론매체의 한국 관련 보도 행태 연구.” 『언론과 사회』 21(2), 119-159.
- 최지영. 2016. “시진핑 시기 중국 반(反)부패의 특징과 함의: 개인 권력 강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6(4), 125-150.
- 한강우. 2016. “인민일보를 통한 강택민과 시진핑의 권력집중현상 비교연구.” 『중국학』 57, 337-354.
- Brecher, Michael. 1972. *The Foreign Policy System of Israel: Setting, Images, Proces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Brody, Richard A. 1984. “International Crises: A Rally Point for the President.” *Public*

- Opinion* 6(6), 41-43.
- _____. 1991. *Assessing the Presiden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Callaghan, William A. 2010. *China: The Pessimist N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ung, Chien-Peng. 2004. *Domestic Politics, international bargaining, and China's territorial disputes*. London: RoutledgeCurzon.
- Coble, Parks M. 1991. *Facing Japan: Chinese Politics and Japanese Imperialism, 1931-1937*.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Druckman, James N. and Arthur Lupia. 2000. "Preference Form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1), 1-24.
- Heberer, Thomas. 2015. "China in 2015: Creating a New Power and Security Architecture in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Asian Survey* 55(1), 82-102.
- Inoguchi, Takeshi. 2013. "Japan in 2012: Voters Swing, and Swing Away Soon." *Asian Survey* 53(1), 184-197.
- _____. 2014. "Japan in 2013: Abenomics and Abegeopolitics." *Asian Survey* 54(1), 101-112.
- Jakobson, Linda and Dean Kang. 2010. "New Foreign Policy Actors in China." *Policy Paper* 26.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 Johnson, Chalmers. 1962. *Peasant Nationalism and Communist Power*.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mpton, David M. 2013. *Following the Leader: Ruling China, From Deng Xiaoping to Xi Jinp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eccall, Frances. 2011. "Japan in 2010: Messy Politics but Healthier Democracy." *Asian Survey* 51(1), 41-53.
- Putnam, Robert D. 1988.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3), 427-460.
- Saich, Tony. 2006. "China in 2005: Hu's in Charge." *Asian Survey* 46(1), 37-48.
- Swaine, Michael D. 2011. "China's Assertive Behavior-Part One: On 'Core Interest.'"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4.
- _____. and M. Taylor Fravel. 2011. "China's Assertive Behavior-Part Two: Maritime Periphery."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4.
- Yu, Guo. 2012. "Dynamics of Popular Nationalism in China's Japan Policy in Post-

- cold War Era.” Ph. D. Diss., University of Bermingham.
- Zhao, Suisheng. 1998. “A State-led Nationalism: The Patriotic Education Campaign in Post-Tiananmen China.”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1(3), 287-302.
- Zheng, Yongnian. 1999. *Discovering Chinese Nationalism in China: Modernization, Ident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13. “China in 2012: Troubled Elite, Frustrated Society.” *Asian Survey* 53(1), 162-175.
- 『人民日報』, 2000~2017.

Abstract

China's Use of Hostile Memories of Japan and its Influencing Factors: Focusing on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Chinese-Japanese War

Choongkoo Le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This article examines the strategic use of hostile memories of Japan by Chinese authorities. The emergence of memories of the past war with Japan through the Chinese official media may be regarded as an expression of domestic nationalism as a result of conflict with Japan, and it can also be assumed to have been caused by the domestic political process. I examine whether the expansion of articles covering two Sino-Japanese wars in the “People’s Daily” could be explained by external factors of Japan’s behaviors and internal factors of unique political processes in China. The result shows that when both factors are combined, the strategic use of hostile memory is significantly increased. This means that when both the political sensitivity to public opinion and nationalist public opinion are expanded, the hostile history issue against Japan is actively handled by Chinese authorities.

Keywords | Sino-Japanese War (1894-1895), Chinese-Japanese War, Sino-Japanese relations, Chinese domestic politics, Chinese nationalism

